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선배정… 상장 직후 매물부담 줄인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부터 시행
6·8·10개월 의무보유 매도 시점 분산
코스피 20%·코스닥 30% 사전 배정
상장 초기 매물 쏠림·주가 하락 완화
사전수요예측 허용해 공모가 합리화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구분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 동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비율을설정해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시장별 코너스톤투자자 수량상한〉

구분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일반 기관 물량 중 비율	20%	10%	30%	20%
전체 공모 물량 중 비율 환산	10%	5%	4.5~10.5%	3~7%

상장 후 최소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상장 직후 매물이 쏟아지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 기관투자자의 매입 의사를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래 보유할 기관에 사전 배정… 6·8·10개월 분산 보호예수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인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상장 전에 중·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투자자의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 배정을 받은 기관은 물량의 절반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머지는 전체 배정 물량의 30%를 8개월, 20%를 10개월간 보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주를 배정받았다면 50주는 6개월, 30주는 8개월, 20주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다. 보호예수가 한꺼번에 풀려 매도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다.

참여 기관에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가격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여력도 요구한다. 사전 청약 물량 규모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자기자본을,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하면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관 규모에 일률적인 하한을 두는 대신 투자하려는 규모에 비례해 요건을 정했다. 대형 기관뿐 아니라 충분한 역량과 재무 여력을 갖춘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사전 배정 한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다르게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 공모주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우리사주조합·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몫이다.

코스피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20%까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기관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다.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너스톤투자자 전체에 최대 10%, 기관 한 곳에 최대 5%를 사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의 30%까지 사전 배정하고, 기관별 한도는 20%로 정했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에 별도로 배정하는 비중이 커 코스피보다 한도를 높였다. 전체 공모 물량 대비 사전 배정 한도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중 등에 따라 4.5~10.5%다.

계열사에 유리한 공모주를 몰아주거나 흥행이 어려운 공모주를 떠넘기는 행위도 차단한다. 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이면계약도 금지한다.

◆공모가 범위 정하기 전 기관 수요 확인… 가격 산정 합리성 높인다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상장 주관사가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물어보는 절차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부터 시장 수요를 확인해 공모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에 향후 증권신고서로 공시할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다루는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제공한 시점과 상대방·내용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계약을 어겨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대체로 기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수준으로 정했다. 다만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수요예측에서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위탁재산 요건을 50억원으로 낮춰주는 예외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가치 평가 능력과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 등을 확인하는 추가 요건도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희망 공모가 범위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코너스톤투자자로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권 해킹 사고, CEO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이찬진 금감원장, 보안 강화 지시
보안 부실 땐 매출 3% 과징금 추진
해킹 사고별 감독분담금 차등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가 발생한 대형 증권·보험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보안 취약점을 방치해 사고가 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3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안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킹 공격이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차원의 자율보안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통합관제시스템(FIRST) 등을 통해 기본 보안 통제 미흡점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AI 에이전트 기반 사이버 공격 유의 등을 안내해 왔다. 침해 사고가 본격화된 뒤에는 금융권 전체에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원장은 사고 발생 회사가 사전 안내 사항을 준수하고 자체 점검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개인정보 유출에 내부통제 강화

분기별 '윤리준법의 날' 지정·운영
전 임직원 19개 항목 자가점검 실시

한양증권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나선다. 외부 그룹웨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임직원이 윤리원칙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양증권은 올해부터 1·4·7·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준법의 날에는 전 임직원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와 개인(신용)정보,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보호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관련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레터(Compliance Letter)를 통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금융사고 사례 등 임직원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운영은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양증권은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 솔루션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고객과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한양증권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솔루션 공급사와 긴급 보안 패치를 완료했다.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 기관 신고와 유출 대상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윤리준법의 날을 통해 임직원이 관련 원칙과 법규를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기술특례상장 75%, 5년 수익률 코스닥 하회

자본연, 장기 주가성과 분석
평균 8.4%에도 중위값 -54%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75%가 상장 후 5년간 투자 성과에서 코스닥지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성장을 위한 코스닥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장기 주가성과를 분석하고 코스닥시장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제도 도입 21년 만에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300개사를 넘어섰다. 누적 공모금액은 약 8조원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가운데 5개사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다.

분석 결과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일반 상장 기업과 재무적 특성부터 차이를 보였다. 상장 전 매출액 중위값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85억원으로 일반 상장 기업(421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다. 총자산이익률(ROA) 중위값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20.5%로 일반 상장 기업(14.1%)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업력 중위값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10년, 일반 상장 기업이 11년으로 비슷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장기 주가성과는 전체 평균과 개별 기업의 분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5년 보유기간 초과수익률(BHAR)을 분석한 결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평균은 8.4%로 일반 상장 기업(-5.4%)보다 높았다.

주목할 점은 중위값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54%로 일반 상장 기업(-38%)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25% 분위 역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91%로 일반 상장 기업(-70%)보다 부진했다. 75% 분위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8%에 그쳐 일반 상장 기업(20%)을 밑돌았다. 이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75%가 5년간 코스닥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재단, 청소년 250명 해외체험 지원

올해 세 차례 글로벌 문화체험단 운영
中 선전서 자율주행·드론 기술 체험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진행한 제29회 글로벌 문화체험단 일정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세 차례에 걸쳐 청소년 250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일정에는 73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 동안 비야디(BYD), 바이두 아폴로 전시관, DJI, 선전과학기술관 등을 방문해 자율주행과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살펴봤다. 멘토와 함께 미래 기술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 보는 프로젝트 발표회도 진행했다.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미래 기술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07년 시작해 지금까지 청소년 2636명에게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청소년들의 미래 준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